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관련 산업계 공동 입장 발표

보도일시 : 5월 21일(목) 조간 (인터넷은 5월 20일(수) 11:00 이후)

내용문의 : 산업정책팀 김주태 팀장(02-3771-0454, 010-8539-8217)

산업정책팀 황문수 조사역(02-3771-0177)

### 산업계, 배출권 재할당 요구

- 배출전망 재산정에 따른 배출권 재할당 당연
- 지킬 수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 국가 신뢰도 훼손

정부는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참을 위해 국제 사회에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5월 내 마무리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UN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이하 '산업계')는 정부의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앞서 산업계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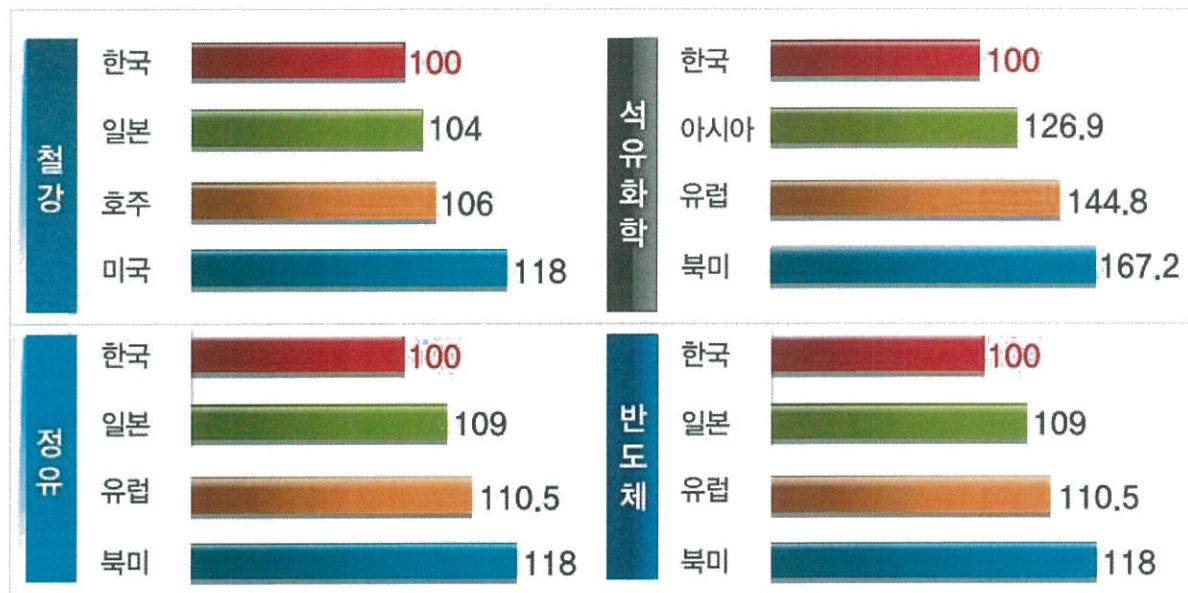
#### 산업계, 배출전망 재산정에 따른 배출권 재할당 필요

먼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천4백만톤, 2011년 3천1백만톤, 2012년 2천만톤 계속해서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계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BAU)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산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어 온 만큼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출전망에 단 1톤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는 산업계 재산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할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과 감축기술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2020년 까지의 감축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해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 시각임을 강조했다. 석유화학, 비철, 폐기물, 시멘트 등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지나치게 작아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해외 생산거점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절대 부족한 탄소 배출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



주: 제품 한 단위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 수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음

자료: APP Steel T/F, Solomon Study, Solomon Associates, World Semiconductor Council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투자기업들 중 상당수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단가 상승 우려로 국내 생산물량 배정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킬 수 있는 적정한 감축목표 제시가 국가 신뢰도 높여

산업계는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상당한 수준의 감축목표이지만 탄소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세일가스 사용의 본격화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선언해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이다. 선진국 제출 시한인 3월을 넘긴 일본은 다른 나라의 감축 수준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6.5% 수준으로 가정 부문 39.3%, 에너지 전환 부문 27.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 신뢰를 위해서라도 空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을 경계하였다.

산업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기존 배출전망치 수정과 과소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재할당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새로운 2020년 이후의 국제사회에 제시할 감축목표는 감축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계가 감축 노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주문하였다.

첨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 1부. 끝

<첨부>

##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엔저 등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 보다 한발 앞서 전국 단위의 강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소 할당된 배출권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2010년~2012년 실제 배출량이 정부 전망치를 지속 상회하는 배출 추정량 오류 가능성, 비현실적 감축기술에 근거한 감축목표 설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과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 현실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 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산업계는 정부가 2020년 이후 감축 목표설정에 앞서, 잘못 추정된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의 재검토와 이에 기반한 1차 계획기간(2015년 ~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 7천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는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로의 생산 이전을 부추길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배출전망치 재산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이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업계가 정부의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추산한 배출전망보다 실적이 2010년 1천 4백만톤, 2011년 3천 1백만톤, 2012년 2천만톤 정도 계속 초과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배출전망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 대한 실질적 분석과 예측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셋째,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출할 2020년 이후 감축 목표는 감축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나 기술적 한계 등을 충분히 감안해 설정해야 합니다.

2020년 감축목표 설정 당시 정부가 대표적 감축수단으로 여겨졌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은 2020년 이전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들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 감축 잠재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증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 5. 21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민간발전협회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

**J 중앙일보**

입력 2015.05.21 01:59 / 수정 2015.05.21 11:19

 인쇄하기 취소

## ‘탄소 규제’ 제조업의 비명

배출권 거래제 올부터 시행  
할당량 넘으면 과징금 폭탄  
일부 공장 “생산 감축 검토”  
전경련 “배출량 늘려 달라”

매그나칩 반도체는 최근 충북 청주 공장의 생산량 감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 분사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TV·휴대전화용 IC 반도체다. 이 제품으로 매출 7000억 원대를 올리고 직원 3200명의 생계까지 책임진다. 하지만 올해 시행된 ‘탄소(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발목이 잡혔다.

당초 회사 공장에서 나오던 온실가스는 연간 90만t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68만t을 허용했다.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오면 된다지만 ‘거래 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초과 배출량에 과징금을 물리면 6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반도체는 가격경쟁력이 생명인데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정부 당국의 온실가스 규제 후폭풍이 대한민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 한국은 올 1월부터 선진국보다 앞서 전국 단위의 강제적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했다.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려는 좋은 취지 이지만 기업별 탄소 배출권이 턱없이 부족한 등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쌍용양회는 업체들과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다. 회사 관계자는 “시멘트 1t을 가공하면 이산화탄소가 0.9t 쓸어진다”며 “마땅한 감축 수단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급기야 산업계가 집단 항의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반도체·철강 등 25개 업종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배출 가능한 할당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일단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산업계에 총 16억 8000만t의 배출량이 할당됐지만 최소 20억t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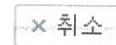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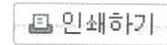
강승진 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가 단위로 ‘강제 배출권’을 실시하는 주요국은 유럽연합(EU) 정도고 미국·일본 등은 일부 지역별로 시행하는 수준”이라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갈라파고스’ 환경 규제가 됐다”고 말했다. 남미의 갈라파고스 섬은 외부와 고립돼 홀로 진화한 곳으로 ‘동떨어진 규제’를 지칭한다.

특히 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조만간 유엔에 제출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신중하게 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하는 사안”이라며 “입보이면 배출 가능한 양이 더 깎일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해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법규 와의 중복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jsool@joongang.co.kr



# J 중앙일보

입력 2015.05.21 01:47 / 수정 2015.05.21 11:19

인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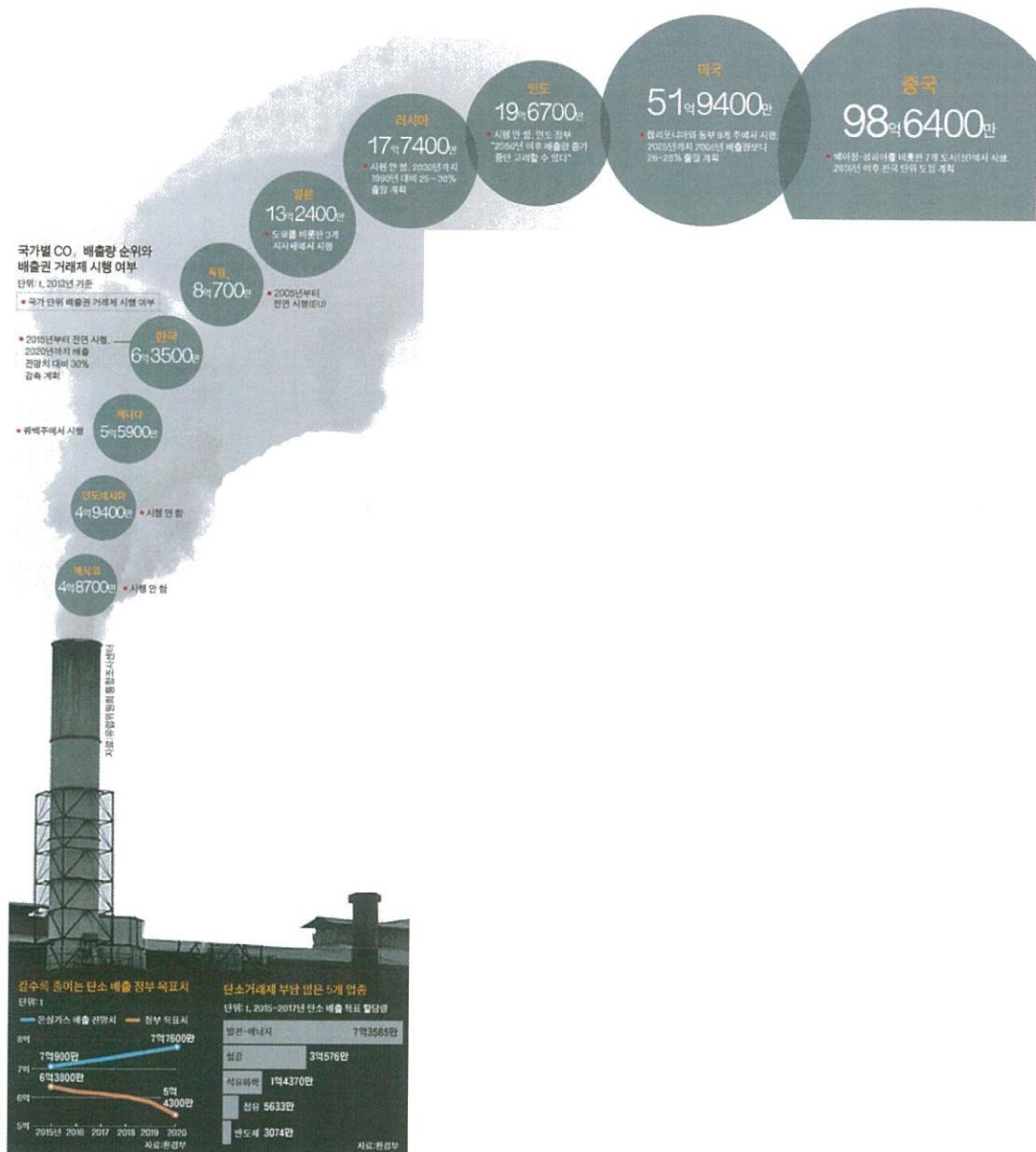
취소

## 탄소 배출 '톱10' 중 한국·독일만 거래제 전면 시행

MB 때 녹색성장 정책 따라 추진  
미·중·일,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불참  
한국, 올부터 시행했지만 거래 부진  
전경련 "2017년까지 기업 부담 27조"  
환경부 "국제수준 감축안 제출해야"

디스플레이업체인 A사 임원 김모(52)씨는 탄소 배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할당한 배출량을 맞출 수 없어 6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출권 비용 부담은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산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이 중국산보다  $m^3$ 당 7000원까지 쌌는데 가격 차가 300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사는 배출량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생산물량을 돌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탄소 배출권을 살 돈은 물론이고 감축 기술도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업체 KG ETS는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산업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업체인데도 배출량을 할당받아 불합리하다"는게 요지다. 이 회사 김상훈 차장은 "정부가 배출권 할당을 강행하면 조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판이라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산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건 '배출권=돈'이어서다. 정부 규제에 따라 525개 업체가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여야 한다. 여기엔 반도체·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대표 기업이 포함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17년까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매년 배출할 온실가스 양을 정해 주고, 쓰고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거래물량은 16억t 중 1만t에 못 미칠 정도로 초라하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급변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와는 거리가 먼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규정한 교토 의정서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중국은 불참했다. 또 2012년엔 캐나다가 탈퇴했고, 일본·러시아는 2013년부터 감축 의무를 거부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뉴질랜드·카자흐스탄 같은 38개국에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배출량이 많은 10대 국가를 보면 한국과 독일에서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인도 등에선 대부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에서만 시행 중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석유화학 업종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과도한 배출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미국과 EU, 스위스가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중국도 6월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수준의 탄소 배출 감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hkim@joongang.co.kr

인쇄하기

취소

## [이슈 포커스] 기업 vs 정부, 탄소배출권 할당량 줄다리기

호경업 기자 hok@chosun.com

입력 : 2015.05.20 03:04

기업 54곳, 환경부 상대로 소송戰 돌입…

재계 "정부案 가혹, 산업경쟁력만 잠식" 정부 "기업들 과민반응"

油化업계 "최대 2~3% 감축 가능한데 15% 줄이라 해… 할당량 재산정해야"

목표 달성못하면 t당 3만원씩 과징금… 삼성전자, 3년간 최고 1500억 부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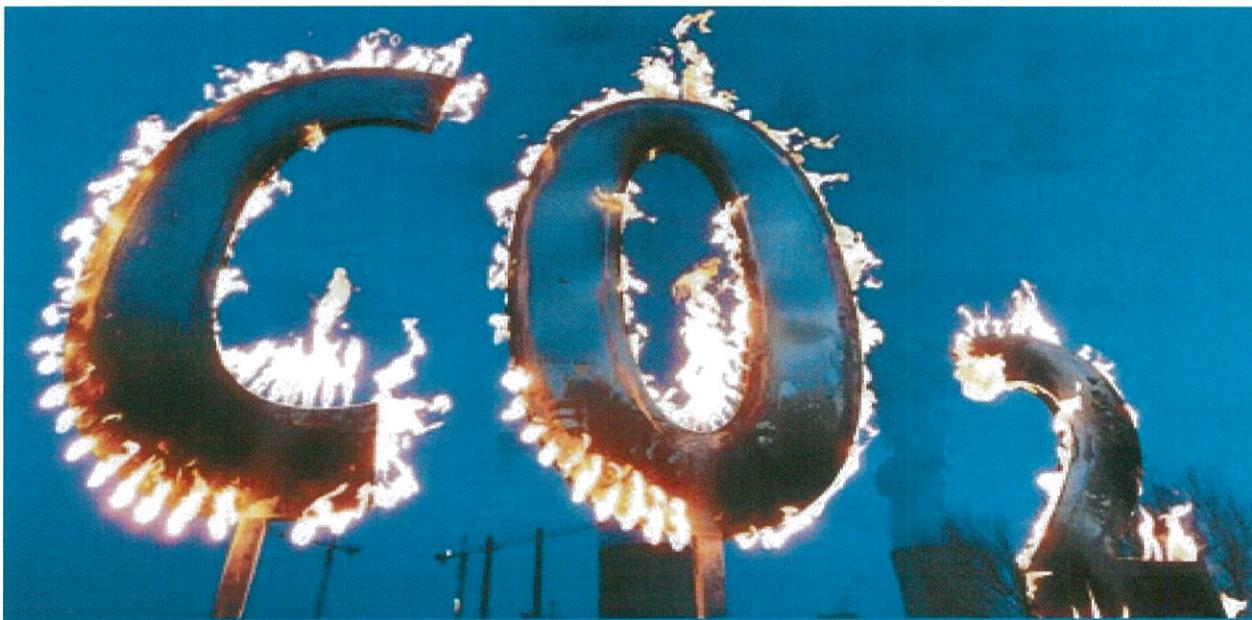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50곳이 넘는 기업이 "할당량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부에 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둘러싼 마찰음이 나올 때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에 반기(反旗)를 든 사례는 찾기 힘들다. 기업들은 "정부 방침이 너무 이상적이며 결국 산업 경쟁력만 잡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에서는 "탄소배출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 제대로 안착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된 배출권 중 남는 부분은 주식처럼 시장에서 팔 수 있고,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한다. 예를 들어 3년간 2000t을 할당받은 기업이 2200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200t의 배출권을 사야 하고, 1500t를 배출했다면 남은 500t를 배출권 거래소에서 팔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배출권 시장가격은 t당 1만원. 시장에 나온 배출권 물량이 없어 구매를 하지 못하면 t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 ◇석유화학업계, "정부 할당량은 가혹"

19일 현재 본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고려아연·영풍 등 비철금속업계 17개사,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 16개사, 동양시멘트 등 시멘트 5개사 등 총 54개사가 소송전에 참여 중이다. 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할당량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정도로 적다"고 주장한다.



업종별 탄소배출권 할당 감축률 2015~2017년 기준



## 배출권 거래제 소송낸 기업들

### 석유화학협회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한화케미칼 OCI 등 16개 회원사

### 비철금속협회

고려아연 영풍 풍산 LS니꼬동제련 등  
17개 회원사

### 시멘트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5개 회원사

### 폐기물협회

KG ETS 대일개발 등 12개 회원사

### 단독 소송

SK케미칼 노벨리스코리아 아시아시멘트  
한국타이어 등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 석유화학업계 측 대리인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기존 탄소가스 배출량에서 당장 15%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할당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이 가혹하게 매겨지는 바람에 대부분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고 또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3년 이후에는 꼼짝없이 t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

10대 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의 한 임원은 "국내 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해 아무리 추가 설비투자를 해도 연간 2~3% 감축이 최대치"라고 말했다. 결국 과징금을 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계 기업들도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다국적 알루미늄 압연기업인 노벨리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최근 1~2년간 4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 증설을 단행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감안해주지 않고 할당량을 배정하는 바람에 향후 3년간 배출권 구매에만 5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지향 상무는 "본사에서 항상 한국과 중국의 경영 환경을 비교한다"면서 "본사가 앞으로는 한국보다 중국을 투자처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올 1분기 사업보고서에 3년간(2015~17년) 516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실제 배출량–할당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족분을 시장에서 t당 1만원에 산다면 516억원이 들고, 시장에서 구입하지 못할 경우 t당 과징금 3만원씩 1500억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한다.

#### ◇再산정해야 vs 소송에 적극 대응

재계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再)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한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라며 "환경보호라는 명분도 좋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기업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 박륜민 기후변화대응과장은 "2005년 독일이 처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을 때에도 기업들이 4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재판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별 기업에 매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되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일 할당량을 넘어선 기업이 배출권을 살 수 없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는 525개 기업에 할당량을 통보했다.

[프린트](#) [닫기](#)